

장애인 탈시설 체계적 지원 나선다 전북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선정

전북도, 5년간 5459억원 투입 7개 신규·10개 계속사업 추진

전북도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자립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담은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마련,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5년간 5,459억 원을 들여 7개 신규사업, 10개 계속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는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3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선, 1단계로 올해 5월 중에 장애인 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장애인 탈시설 TF팀을 구성한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탈시설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거주시설 장애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자립 희망 욕구 조사 조사를 진행한다.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탈시설 정책을 총괄할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어, 2단계로 탈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탈시설 장애인의 사례 관리 및 사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가칭)도 연내 제정한다.

3단계로 장애인 활동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탈시설 관련 계속사업을 추진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3년),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5년)를 제정했다.

또한, 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3개소(7개소 증가), 체험홈 38개소(13개소 증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6개소(3개소 증가) 등 장애인 탈시설

관련 시설을 확대 운영했다.

이와 함께, '장수 뽕밭의집'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와 시·군은 해당 시설 이용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개인별 지원 계획 및 탈시설 욕구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발생한 '무주 하은의집'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개인별 지원 계획 및 탈시설 욕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장애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하반기에 설치·운영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진안군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 사업... 경쟁력 강화·관광거점 도시 도약 기대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여행체험 1번지 전북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도는 24일 진안군의 치유관광 콘텐츠인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 사업이 이번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체류 목적형 관광지로 전환과 홍산, 한방, 산림치유, 마을만들기 등 진안만의 지역특화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와 진안군은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80억 원, 웰스푸드(치유음식, 산골건강밥상 등) 관광 상품화 및 보급 10억 원, 지역공동체 구축 및 지역주민참여·일자리 창출·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등 42억 원 투자 등 총

13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기존 관광개발 정책이 지역간 차별화 부족, 자원간 연계 부족 등에 대한 한계로 지역 주도의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22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국비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진안군을 포함해 총 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전북도와 진안군의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의지가 큰 뒷받침이 됐다.

특히, 전북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생태명명 시대로의 전환에 치유와 힐링의 컨셉이 잘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내 9개 시·군이 신청해, 내부적으로 2개 시·군을 자체 선정했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

획서 보안을 통해 진안군이 서면과 현장, 발표 등 3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공모에 도비 18억 원 지원을 톡 크게 약속하며, 최종 공모도 이끌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광역지자체인 도비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는 지난 2020년 1월 선정된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와 남원 관광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을 연계, 이번에 선정된 진안군을 통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북의 전통문화, 음식 및 생태 체험, 역사문화 관광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해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원유검사 숙련도 '적합' 인증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전국 13개 원유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원유검사 실시기관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숙련도 평가는 원유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검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유검사 실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평가이며, 전국 13개 기관이 원유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도내 487농가 원유의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유산분(유단백, 유당) 등 4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원유가격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집유 업체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유가격을 결정해 낙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이성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철저한 원유검사를 통해 젖소농가 소득 보전과 우수 등 유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원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귀농귀촌 사례 발표대회' 시상식 개최

전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12명 본선 진출자 선정... 김제 조명한 새 대상 수상

전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2021 전북도 귀농귀촌 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귀농·귀촌인 41명이 신청, 예선 심사를 통해 12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선정됐다.

'동반자, 귀농은 가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김제의 조명환씨는 귀농 초기 딸가농장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겪었던 갈등을 끈기 있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부안의 엄수현씨는 귀농 교육의 필요성과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해 성공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장려상은 건강 악화와 화재 등 많은 재난을 이겨낸 사례를 발표한 임실의 구자훈씨와 '나는 6년차 장수군민 이장입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장수의



전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1 전북도 귀농귀촌 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두환씨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참가자들의 사례 발표 영상은 6월 15일부터 '전라북도 귀농귀

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며, 사례집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내 계란 생산 농가 살충제 검사 실시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하절기 생산 계란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해 살충제 잔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5월 24일부터 8월말까지

살충제 검사를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란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살충제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을 포함한 총 34종으로 최종 합격한 계란만이 시중에 유

통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은 회수 폐기,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중지를 포함, 잔류위반농장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잔류위반농장으로 지정시 규제검사는 6회 적용,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소독 및 해충방제 의무화, 농장 정보 공개, 원인조사를 통한 농가 지도 등이 실시된다.

/유호상 기자

제4기 전북도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 모집

전북도는 오는 6월 7일까지 '제4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6명을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당연직 위원 3명, 연임위원 5명과 도의회 추천 몫 등을 제외한 6명을 공개모집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모집분야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동, 법

조계, 학계 및 사회복지 등 6개 분야이다.

신청자격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북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 소재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신청은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도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인권활동 경력 및 전문성 등 위원으로 적합 여부, 성별 균형, 전문분야, 위원회 중복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도청 홈페이지 도민소통-인권공감-인권자료실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작성해 방문접수, 이메일(muksoy@korea.kr),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